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4. 1. 20. Vol. 3

■ 농정이슈

한-칠레 FTA 발효 이후 10년, 양국 간 교역 4.5배 증가

■ 정책브리핑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 발생 및 대응

■ 연구지원

2013년 농림축산식품 수출 실적 및 평가

■ 특별기획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

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

금주의 핫 이슈

〈한-칠레 FTA 발효 이후 10년, 양국 간 교역 4.5배 증가〉

- 관세청, 1.14일, **한-칠레 FTA 발효 이후 10년간**의 교역동향 분석 자료를 통해 양국 교역 (2003년) 16억 달러 → (2013년) 71억 달러로 **4.5배 증가**
 - 같은 기간 **세계 교역증가 2.9배(3,726억 달러 → 10,752)** 보다 높은 수치로 FTA가 양국 간 교역증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대(對)칠레 수출입 규모] 수출 4.8배(5억 달러 → 25), 수입 4.4배(11억 달러 → 47)
 - 다만, 높은 수출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칠레 수입품의 78.2% 차지하는 동광, 동 등 1차 원자재 제품**의 수입증가 및 국제가격 상승으로 무역수지 적자 확대(5억 달러 → 22)
- [품목별 수출] * 13년 기준 자동차가 포함된 **기계류 비중 60.9%**로 가장 높고, 화학공업(11.4%)·광산물(8%) 등의 순
 - 칠레 수출의 52%를 차지하는 자동차가 10년 동안 8배 증가해 전체 수출 건인
- [품목별 수입] 동광 등의 광산물과 동 제품 등의 **철강금속이 전체 수입의 78.2% 차지**, 농림수산물(13.0%)·화학금속(8.6%) 순
 - (돼지고기) FTA 발효 이후 **중량기준 2배**(15천 톤 → 30), **금액기준 3.4배**(30백만 달러 → 102)
 - ※ **우리나라 대(對)세계 돼지고기 수입증가(중량 2.4배, 금액 4.5배)보다 낮은 수준**
 - (포도) FTA 발효 이후 **중량기준 5배**(9천 톤 → 47), **금액기준 10.6배**(14백만 달러 → 144)
 - ※ **상당한 수확기** 및 우리나라 비수기에만 관세 인하하는 **계절관세** 등으로 **97% 이상**이 우리나라 포도 수확 비수기인 1월~5월 사이 수입
- [전망] 2014.1월부터 한-칠레 FTA 관세가 추가로 철폐되는 품목이 늘어남에 따라 양국 간 교역은 더욱 확대
 - (한국) 돼지고기와 키위 등 농림수산물 473개 관세 추가 철폐, 품목 수 기준 96.5% 무관세, (칠레) 청소기와 축전지 등 한국 주요 수출품 1,445개 품목 추가 관세 철폐, 전체 95.1% 품목 무관세

자료 : 문화일보·KBS(2014.1.14.) / 동아일보·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2014.1.15.) / 농민신문(2014.1.17.)

참조 : 관세청 보도자료_「한-칠레 FTA 발효이후 10년 동안 양국간 교역 4.5배 증가」(2014.1.14.)

정부, TPP 참여 박차...1월 중 6개국과 예비 양자협의

- 산업통상자원부, 1.13일, 워싱턴에서 **미국과 예비 양자협의 회 개최**,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에 참여 가속화. 우리나라 TPP 참여 가능성 타진하기 위해 **기존 회원국과 예비 양자협의*** 나설 계획, **멕시코(15일)·칠레(17일)·페루(21일)·말레이시아(21일)·싱가포르(23일)**와 협의, 나머지 회원국과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활용. 결과는 1.28일 발표. **우리나라의 TPP 참여시기는 미국과의 예비 양자 협의 결과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미국은 한국의 TPP 협상 참여 조건으로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한 통상 현안들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한국이 풀어야 할 과제로 금융정보, 자동차, 유기식품 동등성 문제, 농산물 원산지 검증 완화 등 네 가지 제시. **(한국입장) 이 네 가지 통상 현안은 TPP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관련 규칙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 (농민단체)** 미국은 이미 우리나라의 선 FTA 이행 및 관세장벽의 예외 불인정 등을 주장하는 등 TPP 가입 위해 기존 협상참여국 간 도출된 협상내용을 신규 참여국이 전면 수용해야, **농업은 물론 우리 산업 전체에 통상압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

※ TPP는 2005년 논의가 시작된 환태평양 인근 12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FTA로 지금까지 총 19차례 공식협상 개최, '13.12월 TPP 각료회의에서 협상 타결 시도했지만 미·일 간 이견으로 실패. TPP 협상에 참여하려면 '관심표명 → 양자협의 → 참여선언 → 공식 양자협의' 단계를 거친 후 기존 회원국으로부터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야 본협상 참여 가능

자료 : 농민신문(2014.1.13.) / 세계일보·연합뉴스·한겨레(2014.1.15.) / 한국농어민신문(2014.1.16.)

한-인도 정상회담, CEPA 확대 등 경제협력 대폭 강화

- 박근혜 대통령, 1.16일, **한-인도 정상회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등 양국 경제협력 범위 확대하는 방안 합의. ▲주요내용...**(경제·통상환경 개방 확대) 우리나라 진출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정 체결**, 원전과 도로 등 인프라 분야 진출 적극 지원, 우주, IT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정치·안보 분야)** 정치안보 분야 신뢰 강화를 위해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체결, 정상회담 정례적 개최 노력,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의 정기적 개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등에 우려하며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 **(문화 분야)** 양국 간 종전보다 깊은 문화적 이해를 추구를 공동비전으로 설정, 2014~2017년까지 문화교류계획서 체결 등

※ 한-인도 조세조약 개정협상(이중과세방지협정)은 '05.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14.1월 8차 협상까지 9년에 걸쳐 진행, 이번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극적으로 협상 타결.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 감소, 경제교류 확대, 조세정보 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효과 기대

※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핵심으로 하는 FTA와 비교해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한층 확장된 개념. 한·인도 CEPA는 2010년 발효됐지만 일본·인도 CEPA보다 자유화율(관세철폐율)이 현저히 낮아(한·인도 70%, 일·인도 90%) 개선 필요성 꾸준히 제기. 이에 따라 CEPA 자유화율을 일본 수준으로 확대

자료 : 농민신문·NEWSis·동아일보·머니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KBS·MBC·SBS·YTN(2014.1.17.)

참조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_「한-인도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협상 타결」(2014.1.16.)

주요 채소 계약재배 비율 18% 확대 및 겨울 무 가격 안정 위해 시장 격리

- 농식품부, 1.9일, 물가관계차관회의, **농산물 가격 안정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제시. ▲배추 등 주요 채소의 계약재배 비중 확대***...2013년 평년 생산량의 15%가량이던 배추 등 주요 채소의 계약재배 비율 **2014년 18% → 2017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 이를 통해 올해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 5개 품목의 정부 비축 물량은 5만400t으로 지난해 3만200t보다 67% 증가 전망, **▲수급조절매뉴얼 일부 수정·보완**...가격안정대를 비롯한 단계별 기준 가격 다시 재조정, 이 과정에서 도매가격만을 고려할지 산지가격도 함께 감안할지 종합 검토* 할 계획. 한편 **▲겨울무 수급 안정 대책 추진**...겨울무 생산량 증가(평년대비 81천 톤 과잉) 및 **소비감소** 등과 겹쳐, 민간 자율감축 및 소비촉진에도 불구하고, **겨울무 생산량 증가와 김장철 이후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12월 이후 **도매가격 하락 지속**. 이에 따라 1.10일, '14년도 제1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겨울무 수급 안정 위해 **정부 시장격리(30천 톤), 수매·비축(2천 톤), 추가 자율감축(10천 톤) 등 추가 보완 및 수급조절매뉴얼 상 “경계” 정보 발령**, 가격 및 수급 전망 등을 감안하여 **시장격리 등 심각단계 조치 병행 추진**

※ 지난해 김장 배추값 하락했을 때 산지에서는 발을 갈아엎기까지 했지만 도매값은 떨어지지 않아 산지와 시장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자료 : 농민신문(2014.1.13.) / 농민신문·원예산업신문(2014.1.15.) / 농수축산신문·한국농어민신문(2014.1.16.) / 농축유통신문·한국농업신문(2014.1.17.)

참조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_「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결과(2014.4.9.), 농식품부 보도자료_「정부, 겨울무 공급과잉에 대응한 수급안정대책 추진」(2014.1.14.)

설 대비 10대 성수품 수급안정 지원...농축수산물 확대 공급

- 농식품부, **설을 앞두고 구매 수요가 많은 10대 품목*** 선정, 1.29일까지 농식품부, 산림청, 농협, aT, 관측센터 등 만관 합동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대책반)’ 운영, 중점 관리**. 10대 성수품의 수급여건은 지난해 가을 풍작의 영향으로 공급 과잉구조 지속, 축산물과 임산물도 설 성수기 수요를 공급하는데 어려움 없을 것으로 예상. 다만 폭설 등 기상이변 시 일시적으로 채소류의 출하가 불균일해질 가능성. ▲성수품 구매가 집중되는 설 직전 **1.16일~29일까지 10대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대비 1.5배 확대 공급****. 한편 올해 굵은 과일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밝히고 중소과일 구매를 많이 해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

※ 사과, 배, 쇠고기, 쌀, 대추, 배추, 무,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 1일 공급계획: (평시) 5,256톤 → (기간 중) 7,695(146%)

자료 : 문화일보-해럴드경제(2014.1.14.) / 농수축산신문(2014.1.16.) / 농민신문-농축유통신문-한국농업신문(2014.1.17.)

참조 : 농식품부 보도자료_「농식품부, 설을 앞두고 10대 성수품 공급 및 구매편의 제공에 만전」(2014.1.14.)

영농자재 가격 ‘대폭 인하’

- 농협중앙회, **농업인 영농비 절감 위해 2014년 비료가격 평균 11.1% 인하, 농약과 농기계는 전년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소폭 인하***. 이번 영농자재 공급가격 인하로 인해 **농가영농비 절감액**은 비료 687억 원, 농기계 195억 원 등 모두 **882억 원, 농가별로 7만6천629원 혜택**. 한편 원예용 비료도 화학비료와 마찬가지로 가격 인하해 1월 중 공급할 예정

※ 비료의 경우 국제 원자재 가격이 낮아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쳤고, 콤바인의 경우 입찰 물량 확보로 가격 인하

주요 품목별 공급가격

단위: 원(농기계: 천 원), %

구 분	품 목	2013년	2014년	인하율
비료	그레놀요소	13,050	11,850	9.2
	21복합비료	16,300	13,800	15.3
	맞춤형(평균)	12,552	11,201	10.8
농약	알타코아	28,950	28,850	0.3
	후라단	4,000	4,000	-
농기계	트랙터(60마력)	33,530	33,530	-
	콤바인(5조)	44,480	43,590	2.0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정신문(2014.1.13.) / 원예산업신문(2014.1.15.) / 한국농업신문(2014.1.17.)

정책브리핑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 발생 및 대응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4.1.17.)

발생 및 전개 상황

- **[상황전개]** 전북 고창 소재 종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 신고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부 **1차 검사 결과 H5N1형으로 판정**** → 고병원성 여부 정밀검사 중

※ AI(조류 인플루엔자)는 닭, 오리 등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고병원성 AI의 경우 가축의 폐사율이 높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

※※ H5N1형은 바이러스 표면 모양이 뿔처럼 튀어나온 형태로 **국내외 고병원성 AI 사례의 다수가 이러한 형태**

- **[AI전파 가능성]** 신고농장에서 AI 잠복기(최대 21일) 이내에 **4개도 24개 농가로 오리 병아리 분양(173천 수)**

- **(도계장 출입 확인)** 충북지역 농가 등에(21개소) 병아리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운반차량이 병아리를 분배한 후 **전천 소재 도계장 출입**

의심축 발생농장과 전파의심 경로



□ 대응방침

- **[살처분 실시]** 신고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실시(21천 수 중 12천 수 완료)
- **[확산차단]** 분양농장 24개를 포함한 25개 전 농장에 대해 초동대응팀 파견, 이동제한 및 소독 조치 완료
- **[관련 도계장 및 출입차량]** AI발생의심 농가와 관련된 **도계장은 폐쇄조치,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실시
- **[분양농장]** 임상조사 결과 의심 징후가 발생되면 **예방적 살처분 실시**
-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 ① 농식품부, 지자체 및 각 방역기관에 비상대기 지시 하고 상황실 운영 강화, ② 신고지역에는 기동방역팀 파견하고 방역대* 설정 및 통제초소 설치
※ 변경 500m이내: 오염지역(1농가), 3km이내: 위험지역(19), 3~10km: 경계지역(202)
- (추가 협조체계 구축) 인력지원(국방부경찰청), 항바이러스제제 공급(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 구축
- **[언론보도 계획]** 농가 및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매일 2회 언론 브리핑 실시
- **[병원성 AI로 판명될 경우]**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발동 수준 검토 등 다양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방역 전문가들과 논의할 계획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에 따라 가축전염병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농식품부장관은 가축, 출입차량, 축산종사자에 대한 일시적 이동중지 조치 발동

농식품부,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 마련

□ 개요

- **(목적)** 축산업을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에 걸쳐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 마련
- **(육성 체계 구축)** 원활한 대책 추진 및 성과 제고 위해 **축산농가·소비자·정부가 역할분담 체계** 구축, 친환경 축산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15)

■ 비전 및 목표



□ 주요내용

- **분뇨 및 악취로 인한 환경부담 최소화**
 - 시·군별 가축분뇨 자원화계획 수립 의무화('14), 가축분뇨 정보시스템 구축('14) 및 중장기적으로 양분총량제 도입 검토 등
 - 악취요인에 대한 기준 설정 및 축사 등 시설별 악취 관리지침 마련('14)
 - 체계적인 분뇨·악취 연구를 위한 가축분뇨자원연구사업단 운영('14~'23)

○ **친환경 축산물 공급 활성화**

- 동물복지 인증 대상축종 확대 및 산지축산농가 우선 인증 등 인증체계 친환경 수준에 따라 4단계로 체계화, 실천기준 정비
- 직불금 지급단가 상향 조정 검토 등 친환경직불제 내실화
- 친환경유통 애로사항 발굴을 위한 정부-생산자-판매자간 협의체 운영('14), 전용 판매장 확충 등 친환경축산물 유통채널 구축

○ **환경친화적 생산기반 조성**

- 축종별 축사표준설계도 마련,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14)
- 농가방역기준 설정 및 농장별 질병관리등급제(농장별 질병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농장 푼말에 표시) 단계적 도입 등 농가별 자율방역체계 확립
- 산지축산 시범농장 조성 및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을 통한 새로운 친환경적 사육 모델 정립 및 확산

○ **유통·소비기반 확립**

- 위생 및 품질 수준이 높은 건실한 도축장 육성*, 도축 인프라가 부족한 기타 가축(염소, 토끼 등)은 도축시설 지속 확충
※ '15년(도축장구조조정법 유효기간 만료)까지는 구조조정 촉진, '16년부터는 평가 통해 필요 시 도축장 신설허용, 난립 방지방안 수립 등 도축업 관리 강화
- 전국단위 협동조합형 패커* 및 지역단위 거점도축장('13: 13개소 → '15: 20) 육성
※ 농협 도매점유율(소/돼지): ('13) 18.6/8.6 → ('16) 37.1/25.0
- 식육즉석가공판매업('13.10월 신설) 조기 정착 및 식육가공기사 신설('14) 등 식육가공산업 육성

○ **사료 및 축산자재의 안정적 공급**

- 수의사처방제 적용 확대('13.8월: 동물약품 판매액 대비 15% → '17: 20%) 및 약 83개 성분의 동물약품에 대한 잔류 허용기준 설정
- 농가 업체 간 공정한 가격 결정 유도를 위한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도입('14) 및 사료 안전성 제고 등 위한 사료첨가제 인증제 도입('15)
- 이모작 사료작물 발적불금 지원(40만 원/ha) 등 조사료 생산 확대 및 농식품 부산물(쌀겨, 폐버섯배지 등) 사료 활용방안 마련('14.4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4.1.16.)

농식품부, 지자체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 **증가하는 귀농·귀촌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도시민 농촌유치 적극 지원**

○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신규 선정]** 8개(시·군별 3년간 총 6억 원 지원)

- (선정된 시·군) 홍천, 충주, 서천, 김제, 화순, 의성, 문경, 하동
※ 연도별 대상 시·군: ('13) 35개 시·군 → ('14) 40개 시·군

○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신규 선정]** 2개(시·군별 80억 원 지원)

- (선정된 시·군) 강원 홍천, 전남 구례
※ 전체 시·군: ('13) 2개소(제천, 영주) → ('14) 4개소

○ **지역민과 귀농·귀촌인간 화합프로그램 보급 및 교육실시**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주요 프로그램 내용 ▮

항 목		기본적 프로그램	운영성격
전담기구		•도시민 유치활동 전담기구 설치(사군 조례) - 담당부서 및 담당자, 대표 전화번호 등 지정 * 경비(인건비) 지원(전체사업비의 10% 내)	•상시운영(귀농·귀촌업무와 반드시 연계) * 사군 조례 제정 등 근거마련
하드웨어		•귀농·귀촌 희망자에 농촌농가체험을 위한 장기 체재형 거주 공간 마련(관내 빈집 활용) •소규모 주거단지 기반조성(5호 이하) - 기존마을 인접 주거를 위한 상하수도, 도로, 부지정비 등 * 하드웨어 지원(전체사업비의 30% 내)	•1회 완성운영 •1회 조성 완료
소프트웨어	이주의사 형성단계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운영 - 성공 귀농인 등을 활용한 상담가 배치 등 - 귀농·귀촌 매뉴얼 제작·배치 - 출향인사 등 DB구축 및 유대강화 - 관내투어(농지, 지역별 재배품목 설명) - 관내 지역·유망작목, 성공사례 등 홍보 •정착 귀농인, 공무원, 단체 등 협의체 구성	•설치, 제작, 구축, 유대강화,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원센터 운영 등
	이주준비 단계	•농촌문화체험/체류프로그램 - 귀농·귀촌 박람회 참석 및 귀농·귀촌 대상 워크숍 등 교육 - 예비귀농인 농사체험 - 관내귀농학습모임 등 동호회 안내·상담 •농촌 빈집 등 부동산 정보 제공 - 전월세, 빈집정보, 농지, 임야 등 - 빈집 체재형 주말농원(하드웨어와 연계)	•상시운영 - 교육이수자 관리
	이주실행 단계	•이주실행 유도 프로그램 - 귀농인의 집, 창업지원사업 등 실질 정보 제공 - One-Stop 행정처리반 운영 - 농촌형 일자리 발굴 및 모니터링 - 관내 사회적 기업 등 참여 안내	•상시운영 - 행정처리반 구성 및 운영, 자료관리 등
	이주정착 단계	•연착륙 적응 프로그램 - 이주 도시민 멘토링제 운영 - 귀농인 적응(선도농가 실습 등) 프로그램 운영 - 귀촌인 만남의 장 운영 - 귀농·귀촌자 학습모임 구성·운영 - 귀농·귀촌인 적응교육 앞선 및 위탁 - 기존 주민과의 화합상생프로그램 운영	•상시운영 - 행사 개최 - 앞선, 위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4.1.13.)

연구지원 2013년 농림축산식품 수출 실적 및 평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3.1.13)

실적

○ [2013년 농림축산식품 수출] 57.2억 달러, 전년대비 1.4% 증가

- (신선농식품) 11.8억 달러, 9.4% ↑
- (가공식품) 45.4억 달러, 0.5% ↓

2013년 농림축산식품 부류별 수출실적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총계	3,206.0	5,644.8	3,336.4	5,724.4	4.1	1.4
신선농식품	355.3	1,079.4	366.5	1,180.8	3.2	9.4
가공식품	2,850.7	4,565.4	2,969.9	4,543.6	4.2	△0.5

○ [예상성과 미달] 2013년도 수출은 2012년의 56.4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 (6.4%↑)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엔화 환율 약세, 유럽 경기 회복 지연 등 대내외 수출여건 악화**로 당초 기대 미흡

평가

1) 수출 부진 이유

○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 원-엔화 환율 급락으로 인해 대(對)일 수출 큰 타격

- 특히, 주요 수출품목인 화학·마걸리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
 - ※ 원/100¥ 환율 추이: ('12.12.26) 1,256.29원 → ('13.5.2) 1,132.76 → ('13.12.26) 1,010.30
 - ※ 대일본 수출 감소 품목: 김치(전년대비 △22.2), 제3맥주(△3.1), 파프리카(△2.2), 장미(△45.6), 마걸리(△57.4) 백합(△33.9) 등

○ 수출비중 높은 일부 가공식품 수출 부진

- (자당)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브라질 수확량이 증가하면서 '12년 후반기부터 설탕가격지수 하락으로 연계
- (귤련) 중동정세 불안으로 최대 수입국인 UAE 등 중동국가로의 수출량 대폭 감소

2) 성과

<부류별>

-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농식품 수출] 9.4%, 3년 연속 9% 이상 증가세 유지
- [신선농식품] 딸기(29.8백만 달러, 전년대비 23%↑), 버섯(38, 14%) 등 **주요품목 수출 증가율은 큰 폭 상승**
 - 대한항공과의 협업을 통해 러시아 등 원거리 항공물량을 확대하고 기내 홍보 프로모션 진행으로 인지도 상승
 - 한류 영향으로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동남아시아 미디어 광고와 홍콩에서의 버스광고 등 다양한 마케팅 전개
- [가공식품] 우유(133%), 조제분유(23%) 등의 **유제품 수출이 20%이상 증가세**를 보이며 주력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

<국가별>

- 홍콩(28.7%), ASEAN(19.0%), 미국(10.5%), 중국(4.6%), 대만(4.1%)이 증가한 반면 일본(△8.6%), EU(△4.6%)는 감소
 - (일본) 엔저 영향에 따른 수출업체 채산성 악화와 일본 내 수요 감소로 對日 **수출 의존도 감소**(2012년 25% → 2013년 22.5%)
 - (중국) 유제품 및 인삼 등이 수출 호조를 보이며 일본에 이어 차기 주력 수출 시장으로 자리매김
 - (미국) FTA 관세 인하 혜택, K-Food Fair 등 지속적인 마케팅 노력으로 증가세 유지,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10%이상 증가율 기록
 - (홍콩) 홍삼(89%), 비스킷(40%), 딸기(37%), 김치(9%) 등 웰빙식품 중심으로 수출 증가해 최대 호황기
 - (ASEAN) 일본에 이어 두 번째 수출비중(17.2%) 차지

특별기획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4.1.15.)

추진배경 및 방향

- 정부, 1.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 확정·발표
- 우리 경제와 사회 곳곳에 방치된 비정상상을 토대로 한 **경제행위(Rent Seeking) 고착화***, **경제의 역동성 크게 저하**, **내수보다는 수출에 의존한 편중된 성장****
 - ※ 경제자유도지수(170여개국, 美 헤리티지재단): ('10) 31위, ('11) 35위, ('12) 31위, ('13) 34위
 - ※ 부패지수(34개국, 국제투명성기구): ('10) 26위, ('11) 27위, ('12) 26위
 - ※※ GDP대비 내수(민간소비+총고정자본형성) 비중(명목, %): ('00) 84.7, ('05) 82.6, ('12) 80.2
- 이에 따라 저성장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경제의욕도 저하**되어 있으며, **경제 내(內) 불균형 심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 **(공공기관 정상화)** 공공기관 부채관리, 원전 등 각종 비리 원천적 차단 등 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
- **(재정·세제 개혁)** 지하경제 양성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세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강화 등
-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법과 원칙 확립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확충, 취약계층 지원 등 시장경제 보완을 위한 불균형 해소 등
- **(창조경제 구현)** 전국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확대, 벤처·창업 활성화, 융복합 등 창조경제를 저해하는 규제완화, 창조인재 육성, M&A 활성화, 신산업 육성 등
- **(해외진출 촉진)** FTA 등 글로벌시장 개척 확대,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확대, 서비스수출·온라인쇼핑 등 신무역을 통한 수출먹거리 창출 등
- **(미래대비 투자)** 저출산고령화 대응, 안정적 에너지수급체계 구축, 온실가스 저감 등 기술개발 확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등
- **(투자 촉진)** 규제 총량제 도입과 투자관련 규제 전면 재검토 등 규제 개혁,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SW 등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과 원스톱 서비스 제공,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 **(소비 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임대시장 선진화, 가계부채 관리, 사교육비 경감, 고령층 소비여력 확충 등
- **(고용률 제고)**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청년 취·창업 지원 등 청년고용 활성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등 여성고용 활성화) 등
- **(중소·중견기업 성장촉진)** 성장단계별 경영애로 해소, 자금·세제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 무역정보·지원 연계 등

※ 주요 추진과제는 향후 의견수렴 등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특별기획

☐ 추진전략

1) 추진 원칙

- 「민-관, 부처 간 협업」: 수립·집행·점검 등 전체 과정 진행
 - 계획 수립부터 집행·평가까지 국민경제자문회의·KDI 등 연구기관·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업, 광범위한 의견수렴
 -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과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경제혁신」의 큰 틀에서 합의·추진
- 「공공부문 솔선수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혁신 확산
 - 공공기관 정상화, 재정·세제 개혁 등 공공부문 혁신을 강도 높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정부의 강력한 혁신 의지를 국민에게 전달
 - 공공부문 혁신의 성과를 토대로 혁신의 바람을 민간으로 확산
- 「구체적인 성과 지향」: 전 부처 역량 결집
 - 세부 과제별로 연차별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과 성과목표 제시, 성과 기준으로 점검·보완
 - 특히, 과제 추진 시 애로요인, 이해관계자 반응 등을 고려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 마련

2) 추진 체계

-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중심으로 수립·집행·점검
- 경제관계장관회의 산하에 민-관 합동 ‘경제혁신추진 T/F’ 구성
- 규제개혁, 서비스업 육성 등은 특별 추진체계 운영·추진

☐ 추진일정

- (2월 중) 각 부처 연두 업무보고 시 정책과제 구체화 → (2월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확정·발표 → (3월 이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감대 확산시행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